

의안번호	제 38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6월 일 (제 281 회)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09년 6월 11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3
----------	-----

제안연월일 : 2009년 6월 11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이유

- 우리나라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정부에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에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정부차원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농어업 개혁안에서 탈피하여 농정의 주체인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 식량의 중요성과 농어업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어업보호와 육성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

붙임 : 건의안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정재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님께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 방문시 '개혁이전의 뉴질랜드 농업같이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농업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3월 23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우리나라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화방안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선진화방안을 기초로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회 등 총 5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47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선정한 과제는 농어업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이와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세제개선 등을 통해 중소농이 전업농을 거쳐 기업농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자칫 현재 농업의 중심체인 가족농의 중소농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우려됩니다.

또한 경제적 논리로 무장한 기업이 농어업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에 수반되는 각종 환경파괴, 중소규모의 농어업인의 몰락 등 문제점도 대두될 우려가 큼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통한 국가기반산업화가 아닌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농어업 개혁은 식량의 중요성과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어업보호와 육성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의원 모두는 우리 농어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하나, 정부차원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농어업 개혁안에서 탈피하여 농정의 주체인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십시오.

하나, 식량의 중요성과 농어업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어업보호와 육성정책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2009년 6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